

다산포럼

기본소득 제도 한국에 적용하려면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기본소득 제도는 자산 규모, 소득 수준, 근로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이미 실행하고 있고 네덜란드·핀란드에서도 특정 집단 대상의 정책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김중인 전 대표는 올해 6월 27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후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려면 재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를 실행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까? 기본소득은 시민권을 전제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개념이다.

만일 20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한 달에 50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0세에서

19세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그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단순화해서 계산하면(20세 이상 인구 3676만 명×1년 소요 예산 600만 원+19세 이하 인구 1007만 명×1년 소요 예산 300만 원=251조 원), 1년에 약 251조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한다.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로 나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하면 2015년 약 16조 원이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기초연금과 보육료 예산 16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해 1년에 235조 원이 필요하다. 235조 원은 노동 관련 예산까지 포함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까지도 포함한다. 2016년 중앙정부 총지출 예산 386조 원의 61%에 달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비현실적 액수다.

기본소득을 50만 원에서 절반으로 줄여서 20세 이상 국민에게 한 달에 25만 원, 20세 미만은 12만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계산하면 125조 원이 들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16조 원을 빼면 109조 원이다. 109조 원은 중앙정부 사회 복지예산 123조 원의 89%에 달하는 규모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다른 사회 복지 예산을 줄이면 실행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달 25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건강보험과 실업

급여 그리고 국민연금 등의 사회복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사회복지 제도가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보장한다고 해서 쉽게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건강보험 보장이 이 미덥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 달에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민간 생명보험사에 내고 있다.

중위소득 이상을 받던 실업자라면 실업급여 상한선 130만 원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아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본소득 제도로 다른 사회복지지를 대체함으로써 복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는 핀란드나 네덜란드 같은 고부담 고복지 국가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처럼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다. 월 25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으로 한국에서 대체 가능한 사회복지지는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 현실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제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또는 아동수당처럼 특정 연령 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는 며칠 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플랜 중 하나로 아동(0~5

살), 청년(19~24살), 노인(65살 이상)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얼마나 할 것 인지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0~5살), 청년(19~24살)과 노인(65살 이상)에게 월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면 40조 원이 필요하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예산 16조 원을 빼면 24조 원이 든다. 25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올리면 소요 재원은 64조 원이 드는 것으로 나온다.

현재의 조세부담률 수준 18%를 부가감세 이전 수준(2007년 19.6%)으로 1.6%p 올리면 연간 약 25조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24조 원 정도 드는 기본소득제라면 국민적 합의와 증세 같은 재원 조달 방안만 마련되면 한국에서도 실행 가능하다.

물론 이 정도의 기본소득 지급으로 심대부가 기대하듯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지만, ‘가난한 청년들에게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 할 것’이고 ‘내수와 중산층을 살려서 장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한다. 또한 아동수당 같은 단순한 정책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이해 상충이 없는 영유아 보육을 지원사업보다 더 효율적일지도 모른다.

정춘 특·특

즐겁게 산다는 것



김대진 동네준인 대표

요즘 철학에 부쩍 관심이 많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자칫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온통 철학이다. 태어나는 것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하나 철학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가벼운 철학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한다.

5년 전쯤 대기업에 다니다가 퇴사하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나는 퇴사와 동시에 ‘즐겁게 살아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이 단순하고 쉬워보이는 목표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발목을 잡았다. 뭘 해야될지 몰랐던 것이다. 비로소 28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충격이었다. 이놈의 자각지각한 회사만 때려치우면 삶이 즐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뭘 해야 재밌을지조차 모르겠다니... ‘멘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고민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살게 됐다.

누군가는 본인이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다양한 청년, 청소년들을 상담해오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즐겁게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은 막연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다’거나 ‘학교 혹은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나도 이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다. 최대한 아는 책을 하며 ‘핀대스럽게’ 한다면 해주자면 “그냥 이것저것 경험해보.”

나 뭘 하면 즐거울지도 모른 채 막연히 여행을 하고 싶었고 그렇게 배낭을 메고 세계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모두가 여행이라는 선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선택,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직업, 모든 사람이 좋아할 사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그렇게 여행을 택했던 사람들 중 다수의 사람은 “여행은 나와 맞지 않는다”며 다른 길을 찾아가곤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행이 본인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보는 것. 즉 ‘경험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이다.

직접 여행을 떠나보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그런 경험의 기회도 적을뿐더러, 본인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들을 강요받으며 다양한 경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학부포가 됐다. 20년 전과 시대가 바뀌었다. 20년 후 분명 다른 시대가 올 것임에도 이 사회는 여전히 변함없는 잣대들을 들이댄다.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20년 후 현재의 직업군 중 절반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금융권, 변호

사, 운수업, 약사 등은 다가올 미래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대표적인 직업들이다.

우리는 그 20년 후의 진짜 모습을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참고로 불과 20년 전, 나는 ‘뽀빠’를 듣고 났다. 스마트폰을 들고다니며 화상통화를 하고 각종 업무를 해결하는 건 ‘공상영화’에서나 봤었던 일이었다.

또래 청년들에게 “본인의 철학을 가져라”라고 조언하고 싶다. 청년들이 각자의 철학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쉽게 표현하면 사회가 그어 놓은 기준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 사회가 “랍스터가 맛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맛있는 거다. 내 기준, 내 삶이 중요한 것이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갈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다. 남이 그러주는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그러하기를 나의 삶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본인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소 잃고 외양간 확실히 고치자



고재관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지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저녁 8시33분경 경북 경주지역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직후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2시간여 동안 중단됐다. 앞서 12일 밤 규모 5.1과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안전처 홈페이지는 3시간 동안 다운된 상태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는 “홈페이지에 연결된 여러 서비스의 문제로 파악되지만 원인은 아직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지진 대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정부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와 필요한 정부 홈페이지가 절실한 순간에 마비된 것이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점검으로 웹서비스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만 있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정부가 지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는 있는 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12일 지진 당시 홈페이지 처리 용량을 최대 80배까지 향상했다며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으나 사이트가 또 다운될 뻔한 게이트가 된 셈이다.

정부의 긴급재난 문자메시지는 이번에도 누락 발송됐다. 지난달 19일 밤 진앙지 인 경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지진 발생 15분이 지나 긴급재난 문자가 보내졌다. 긴급재난 문자 서비스는 오후 8시 38분과 41분에 경주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냈으며, 45분에는 경북지역, 47분에는 부산과 울산, 대구, 경남, 경북지역에서 이뤄졌다. 1주일 전 지진 때보다도 더 늦었다.

지난달 12일 지진 때는 발생 9분 뒤 이뤄졌는데 이번엔 15분이나 늦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면 한 번으로 충분하다. 정부가 공인한 지진 경보 시간은 50초이다. 일본의 경우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초 이내에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가동해 신속 대응하고 있다.

전문인력 운용이나 비상관리 체계에 허점이 없지 다시 한번 철저하고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 강진(強震) 이후 이달 2일까지 여진은 총 455회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후 국내에서 지진이 잦

게 발생했던 2013년(당시 93회) 기록의 4배를 넘어서는 기록으로 이는 초유의 일이다.

지진의 횟수나 규모를 보더라도 국민의 불안감은 한계에 달한 상황인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의 대응 자세가 너무 안이한 게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재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제공 능력과 더 부족한 재난 콘텐츠를 타워 국민안전처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국민은 기상청 관측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을 겪었다. 지난달 19일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은 여진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의문을 달기도 한다.

규모 5.8의 지진 이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게 맞지만, 앞으로 또 다른 본진이 있을지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진앙 인근인 지역에선 유언비어와 불안감에 사로잡힌 일부 시민들이 생필품을 챙기고 대피용 배낭을 꾸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두 차례의 강진을 경험한 시민들이 “내 살결은 내가 찾자”며 “음금용 키트”를 직접 만들어 소지하거나 재난시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진 예보는 커녕 지진 발생 후에도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하는 등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재난대응 비상대책을 세워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할 것이다.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나 시설, 설비 구조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공개하고 비상시 대피 요령을 수시로 전파하는 등 주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려운 교육예산 내에서도 2016년 본예산에 교육환경개선비의 10%인 40여 억 원을 학교건물내진 보강비에 반영해 학교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3회 추경예산에 100여 억 원의 예산을 학교건물 내진보강비로 반영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시설예산은 학생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곳에 우선 반영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난 및 학생건강관리에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공로연수 중인 필자는 평소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아 지난 8월에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제1회 방재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필자는 지진 발생 이후 다시 재연된 부실대응이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본질적인 진앙지임을 인지하고 소 잃고 외양간 확실히 고쳐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을 덜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社說

농수산물유통 사업마저 영남에 몰아준 이유

농수산물 유통공사(aT)에서 관련 사업을 영남에 대거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호남 소외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농어촌을 지원하는 기관마저 대표적인 농도인 전남을 외면한 건,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aT가 생산능력의 판로 확보를 위한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15건 가운데 3분의 2인 10건을 경북에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전남·광주는 1건도 지원받지 못했다. 또 2013~2015년 사업은 55건으로 이중 경북이 23건·경남 3건 등 영남에 절반 가까이 배정됐다. 경북 문경시, 대구경북농능협, 안동시 등은 충북 선정돼 최소 53억~최대 115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전남·북은 각각 8건, 제주 6건, 충남 3건, 강원 2건, 경기·광주 각각 1건에 불과했다. 이는 aT이사 19명 중 영남은 9명인 반면 호남은 1명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호남 홀대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

겠다.

아무튼 농어촌 지원에까지 예외 없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리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편중이 이뤄진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가결돼 국감 파행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던 경북 출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aT시장으로 재임한 시절(2011년 10월~2016년 8월)에 빚어진 현상이니 말이다. 국민당 당정연화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지원 대상에)경북이 선정된 것은 불법적인 선거 지원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그의 장관직 발탁도 흑역 연관이 있는지 따져 볼 일이다. 이번 국정감사로 당시 사장이었던 김재수 장관이 물러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어찌 됐든 나주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aT는 호남권에 대한 현장 친화 경영 차원에서라도 지금까지의 특정지역 편중 지원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 같은 음주운전에 다른 잣대라니

광주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 지역 교원들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반면 행정직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교원·행정직원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의 중심에는 교육청 교원 징계위원회가 있다. 위원회는 음주운전에 걸린 뒤 신분을 감춰다가 발각된 광주 교원 8명에 대해 전원 경징계(견책) 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된 행정직 직원(11명)의 경우 중징계(1명·정직 3개월)·경징계(10명·감봉 1~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행정직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행정직 직원들은 이후 원거리 인사 조치 등의 불이익까지 받았다.

교육청은 당시 인사위원회(6월)를 통해 행정직 직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결정했고 교원들에 대해서는 교원 징계위원회(7월)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의결했었다. 각기 징계 시점이 다르다 는 점에서 징계위가 인사위의 징계 수위를 지켜보고도 다른 잣대를 들이댔음을 알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당시 교육청 감사실의 요구(중징계 3명·경징계 5명)를 묵살한 채 모두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결국 교육청 감사실은 징계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재심사를 교육부에 요구했고, 교육부는 최근 감사실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높여 광주시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원 2명에 대해 중징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조치로 잘못이 시정되긴 했지만 행정직 앞으로는 신뢰를 얻으려면 형평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상을 줄 만하면 상을 주고 벌을 줘야 할 때는 벌을 주는 엄중한 신상판별(信賞必罰)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無 等 鼓

한 연출가 지망 여학생이 서울 반지방에 살았다. 어느 날, 빨래를 널러 옥상에 올라갔다. 마침 이웃집 옥상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세 명이 웃통을 벗고 맨티 차림으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어색한 상황에서 눈길이 마주친 그들은 서로 ‘내가 인사해’ 하고 미루었다.

그 중 한 명이 빨랫줄에 걸려 있던 축축한 셔츠를 입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다. 연출가 지망생은 그날 밤은 인상을 일기장에 길게 썼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동적이고 따뜻했다. 특히 정몽구재단의 후원자를 받아 대극장을 찾은 대학생중 학생들의 저녁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창작 뮤지컬 ‘빨래’는 그렇게 태어났다.

‘빨래’의 무대는 서울 어느 달동네이다. 강원도에서 올라와 서점에 다니는 비정규직 ‘나영’과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 ‘솔롱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나영’은 직장 언니를 부당하게 해고하려는 사장의 횡포에 맞서다 창고 근무로 쫓겨난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언과 임금체불과 같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 준다. 알고 보니 밀린 배수를 재촉

하는 주인 할머니 역시 뇌성마비 딸로 인해 마흔고생을 하고 있었다. 등장인물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캐릭터이다. 모두들 마음 한구석에 상처를 안고 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함께 ‘빨래’를 하며 교감하는 이웃 간의 정(情)이다.

지난 2일 뮤지컬 ‘빨래’를 가족과 함께 관람했다.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객석을 꽉 채운 1000여 명의 관객들은 배우들의 노래와 연기에 울고 웃었다. 감동적이고 따뜻했다. 특히 정몽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대극장을 찾은 대학생중 학생들의 저녁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작품으로 무대에 올랐다. 창작 뮤지컬 ‘빨래’는 그렇게 태어났다.

‘빨래’의 무대는 서울 어느 달동네이다. 강원도에서 올라와 서점에 다니는 비정규직 ‘나영’과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 ‘솔롱고’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나영’은 직장 언니를 부당하게 해고하려는 사장의 횡포에 맞서다 창고 근무로 쫓겨난다. 뮤지컬에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언과 임금체불과 같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보여 준다. 알고 보니 밀린 배수를 재촉

뮤지컬 ‘빨래’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월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서울 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